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15
----------	------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권칠승 · 소병훈 · 박지혜  
강선우 · 허영 · 이기현  
문금주 · 김준형 · 전용기  
김태년 · 김준혁 · 윤종균  
위성곤 · 정준호 · 강준현  
임호선 · 오세희 · 염태영  
송재봉 · 전현희 · 조인철  
김영환 의원(22인)

##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취업·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법적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교육·자립생활·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하며,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

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관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을 위해 진단서비스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교육·돌봄·자립·취업·평생교육·심리상담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됨(안 제23조).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계선지능인의 권리)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③ 경계선지능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및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평가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평가결과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경계선지능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이하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서비스의 범위에서 경제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제선지능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경제선지능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계선지능인 또는 그 보호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계선지능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계선지능인이 재판의 당사

자가 된 경우 그 보호자, 제20조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이하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법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경계선지능인 본인, 그 보호자, 검사 또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경계선지능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이하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결과를 해당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제선지능인 진단검사의 실시와 검사결과의 통지 및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 연계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활동·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하 “경제선지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및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제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맞춤형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제2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형성과 관리 지도, 사회성 훈련 및 경제·법률·문화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관리 지도, 사회성 훈련 및 경제·법률·문화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취업 및 고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지도 실시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기준에 따라 고용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희망·적성·능력 및 직종 등

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꾀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취업알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심리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심리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녀양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

제20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



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취업·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지원
7.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취업·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축적

## 및 관리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례관리

8. 제12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위  
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  
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경계선지능인  
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  
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  
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

양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4조(비밀유지 의무)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22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